

## 2.13 합의 1주년 평가와 전망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들어가기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 문제는 진정 국면을 맞는 듯 하였으나,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로 다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6개국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으나 북미 양국간 입장 차이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6자회담과 연계되면서 교착 상태는 지속되었다.

#### < 북핵 관련 주요 일지 >

일 시	주 요 내 용
2002. 1. 29	-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이란·이라크 '악의 축' 규정
2002. 10. 4	- 북, 미국 방북 대표단에 농축우라늄(UEP 운영 사실 고지), 2차 북핵 사태 발발
2002. 11. 14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북중유지원 중단 발표
2002. 12. 12	- 북한, 핵동결 해제 발표(영변원자로 봉인 제거, IAEA사찰단 철수)
2003. 1. 10	- 북한, 정부 성명 통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2003. 2. 26	- 북, 영변 핵시설 재가동
2003. 8.27~29	- 제1차 북핵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2005. 2. 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 9.13~19	- 2단계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서 개최, '9.19 공동성명' 채택
2006. 7. 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2006. 10. 9	- 북한, 핵실험 실시
2006. 10. 14	- UN안보리, 대북 제재안 가결
2006. 11. 18	- 부시대통령, "종전 선언과 서명" 의사 표시(하노이, 한미정상회담)
2006. 11.28~29	- 미국, 베이징 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에게 '초기 이행 종치' 제안
2006. 12.18~22	- 2단계 제5차 6자회담, 북한 先BDA 해결 주장으로 성과없이 폐막 - 방코델타아시아(BDA) 포함한 북미 금융 1차실무회의(12.18~19)
2007. 2. 8~13	- 3단계 제5차 6자회담, '2.13 공동 합의' 채택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대북 지원 분담에 합의
2007. 7. 14	- 2.13 합의 첫 단계 이행 조치로 북에 중유 지원, - 북은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 폐쇄 발표
2007. 8. 17	- 북핵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2007. 9. 2	- 북미, UEP를 포함해 연내 북핵 전면 불능화 합의
2007. 10. 3	- 6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핵프로그램 신고 연말까지 완료,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기로 합의(10.3 합의)
2007. 12. 6	- 부시 미 대통령, 북한에 "성실 신고 촉구" 친서 전달
2007. 12. 31	-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 및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뤄지지 못함
2008. 1. 30~31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성길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2008. 2. 16	- 힐 차관보,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 강조

한편,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10월 9일 핵실험 및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채택 등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2.13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기술적 문제들로 인해 BDA 문제 해결에 4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7월 중순 1단계 행동 조치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 2단계를 규정한 '10.3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북한이 10.3 합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키로 약속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불이행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 2.13 합의와 10.3 합의의 주요 내용

### 2.13 합의 내용 및 진행 추이

#### ① 2.13 합의의 주요 내용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악화되던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하노이 한미정상회담('06. 11. 18)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국전 종전 선언과 공동서명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에 있었던 북미 베를린 회동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2.13 합의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등가성과 동시 이행 원칙하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이행 조치 합의서인 2.13 합의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과 핵 프로그램 신고 조치에 대해, 여타 참가국들은 상응 조치로 대북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60일 이내 핵시설의 동결 및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참가국들은 60일 이내에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이행하기로 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핵시설의 불능화(disabling)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위해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 대북 지원 분담에 있어서는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하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 이후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5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5개 실무그룹은 한반도 비핵화(의장국 중국),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의장국 러시아)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이다. 특히, 북미 양자 대화를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의 의제가 확실히 되었다.<sup>1)</sup>

### < 2.13 합의의 주요 내용 >

	합의 30일 내 (~3. 14)	합의 60일 내 (~4. 14)	핵 불능화 단계
북한	- 5개 실무그룹 가동 개시	-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 IAEA 사찰관 복귀 요청 - 핵포기 대상 목록 협의	-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 현존 핵 시설 불능화
여타 참가국	- 한반도 비핵화 - 북·미 관계정상화 - 북·일 관계정상화 - 경제 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 BDA 동결자금 일부해제	- 5개 실무그룹 회의 가동 - 중유 5만 톤 긴급 지원 - 6차 6자회담 재개(3. 19) - 북미 양자 대화 -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협의 - 북일 양자 대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6개국 외교장관급 회담 - 남북한 미·중,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상 (별도 포럼 운영)

#### ② 2.13 합의 이후 진행 추이

2.13 합의 직후에는 6개국 간 합의대로 5개 실무그룹 회의들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3월 5~6일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15일 베이징에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 16일 베이징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17~18일 베이징에서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2.13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0일 이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BDA에 동결되었던 북한 자금이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 계좌

1) 자세한 내용은 홍순직,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 과제",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7.3.9. 참고

에 입금되도록 주선하여 BDA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BDA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은 7월 14일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을 발표하고, 7월 18~20일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8월 7~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2차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 16~17일 중국 선양에서 제2차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20~21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9월 1~2일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5~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그리고 미·중·러 핵전문가 9명이 9월 11~15일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였다.<sup>2)</sup>

### 10.3 합의 내용 및 진행 추이

#### ① 10.3 합의의 주요 내용

9월 6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북·시리아간 핵기술 협력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9월 27~30일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었다. 협상 결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라는 10.3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북한은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방사화학 실험실(재처리 시설) 및 핵 연료봉 제조 시설의 불능화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미국이 제공하며 해당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시리아간 핵물질 이전 의혹을 의식한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 조치와 병렬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sup>3)</sup>에 따라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과 중국이 각각 5만 톤씩 제공한 10만 톤을 포함하여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

2) 자세한 내용은 여인곤 외,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 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7. pp. 29~43 참고.

3)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 간 2002년 9월에 서명한 '평양선언'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과거 청산과 납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50만 톤은 증유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발전소와 유류 저장 시설 개보수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 10.3 합의의 주요 내용 >

한반도 비핵화	불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li> <li>- 금년 내 영변의 3개 핵시설(5MW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제조공장) 불능화 완료</li> <li>※ 구체 조치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라 수석대표들이 채택</li> <li>- 미국 : 불능화 활동 주도 및 초기 자금 제공</li> <li>- 2주내 전문가 그룹 방북</li> </ul>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 금년 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li> </ul>
비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li> </ul>
관계 정상화	미·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공약 이행</li> <li>-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을 상기(recalling)</li> </ul>
	일·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측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li> <li>- 양측간 집중적 협의를 통한 구체 조치 모색</li> </ul>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기제공 10 만 톤 포함</li> <li>- 구체 사항은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 최종 결정</li> </ul>
6자 외교장관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 개최 재확인</li> <li>- 의제 협의를 위한 6자 수석대표회의 사전 개최</li> </ul>

자료 : 외교통상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문 요지”,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참고.

### ② 10.3 합의 이후 진행 추이

북한이 10.3 합의에서 2007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불이행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전망은 불투명한 국면에 놓여 있다. 신고 불이행으로 미국 내에서는 대북 보수파를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정부는 일단 북한의 신고를 촉구하고 기다리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4)</sup>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는 현재 80% 가량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월 13일 브리핑에서 “현재 불능화는 북측이 약속한 11개 조치 중에서 8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는 연료봉 인출 문제 등 안전을 위한 기술적 문제만 남았다”고 평했다.

4) 전봉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발전 방안”, 통일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경협 발전 방안』 2008.2.21 발표자료. p. 9.

## 비핵화 2단계의 쟁점<sup>5)</sup>

### 신고의 쟁점

#### 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의 최대 쟁점은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를 초래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 문제이다.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Highly Enriched Uranium: HEU)을 가동한다는 정보 제시에 대한 북한의 '시인'으로 제네바 북미기본합의(1994.10)가 파기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초래되었다. 2007년 미국은 HEU에 대한 정보 판단을 '중간 단계의 확신'으로 하향 조정하여 UEP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2007.12.21)는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핵 농축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여 UEP의 존재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8.1.4)를 통해 "지난 11월 핵 신고서를 미국에 통보했으며, 우라늄 농축 관련 군사시설까지 참관시키며 알루미늄관이 관련 없음을 해명"했다고 밝히고, 미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② 북한-시리아간 핵 협력설

미 워싱턴포스트지(2007.9.21)가 영변의 핵시설과 유사한 시리아 핵 의혹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 소식설을 보도함에 따라 북한-시리아간 핵 협력설이 새로운 신고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미국 내 대북 강경론자들은 시리아 핵 이전설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이는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신고 조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조선신보(2008.2.12)를 통해 "10.3 합의 문건에 핵무기와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5) 자세한 내용은 전봉근, "2008년 북미 관계의 쟁점과 전망: 6자회담 10.3 합의 이행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1.30 참고.

6) 자세한 내용은 조민, "북핵,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는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08-02 참고.

### ③ 신고의 기타 쟁점

미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에는 플루토늄 총량, 핵무기 수, 핵실험 시설, 기타 핵확산 기록을 포함하여 검증 방안까지 포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총량 30kg을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 연료봉을 3회 교체하였고, 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 5~8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약 50kg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의 '검증' 문제도 검증의 범위, 수준, 시기 등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쟁점

미 정부는 2007년 11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하였다. 북한의 신고 범위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자 경제제재 해제 절차를 중단하고 관망하기로 입장을 전환한 것이다. 또한 2007년 가을 제기된 시리아 핵 이전설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우선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에너지 지원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상응 조치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여 북미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 < 10.3 합의 이행 쟁점 >

	미국	북한
10.3 합의 이행	-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촉구	- 불능화와 신고 완료 주장
UEP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	- 알루미늄관 샘플에서 농축 흔적 발견(워싱턴 포스트지)	- 의혹 해소 위해 수입 알루미늄관 사용 군사시설 참관 허용 및 샘플 제공
북-시리아 핵 협력설	- 신고시 공개 대상	- 10.3 합의에서 핵무기, 기술, 지식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이미 명문화하였음
핵 프로그램 신고	- 신고 불이행 :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촉구(플루토늄 총량 UEP, 시리아 핵 확산, 핵실험 시설 등) - 공식 신고는 의장국인 중국에게 해야 함	- 11월 미 측에 핵 신고서 통보, 합의 완료
대책	- 6자합의 이행 의지 재확인 및 북한의 신고 조치 이행 촉구	- 미 측의 불이행(에너지·설비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중단)으로 폐연료봉 추출 속도 조절

자료 : 전봉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발전 방안”, 통일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경협 발전 방안』 2008.2.21 발표자료 참고.

## 향후 북핵 시나리오 및 남북 관계 전망

### 현상 지속 시나리오

북한은 6자회담 프로세스에 응하되 신고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도 먼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시간 끌기 전략을 지속하고, 미국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어 현재의 지체 및 서행 국면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탐색전으로 북핵 신고 문제를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강경파의 반발로 테러 지원국 해제 절차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북한에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의무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북미간 대화가 공전될 수 있다. 현상 지속 시나리오의 경우 미 대선 이후 새로운 대북 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북핵 신고 문제의 연내 해결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상 지속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남북 관계도 더 이상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만 현상 유지 차원에서 진행될 뿐 새로운 남북 관계 모색을 위한 접근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낙관적 시나리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에 충실히 협조하고, 미국도 테러 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중단을 이행하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 해제가 아쉬운 상황이고, 미 행정부 역시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실행이 지연된 중유 2차 지원분 5만 4,000 톤에 대한 선적 작업을 완료하였다(요미우리신문, 2. 24). 북한 역시 지난 2월 11일의 APTN에 이어, 22일에는 미국 ABC 방송에 대해 영변 핵시설 현장의 촬영 및 취재를 허용하는 등 북핵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미 양국의 북핵 해결 의지로 북핵 신고 문제의 연내 해결 및 핵폐기 3단계 절차에 대한 협의 진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남북 관계도 '비핵·개방·3000 구상'이 구체화 되어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새정부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경협 사업에 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비관적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해제를 주장하거나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미국 내 강경파의 부시 행정부에 대한 현 대북 정책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한반도 내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2.13 합의 이후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와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볼 때 비관적 시나리오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남북 관계 역시 경색 국면을 맞게 되어 신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물론이고, 기존 추진 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마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및 결론

2.13 합의 이후 BDA 문제로 북핵 해결 1단계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BDA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1단계 조치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2007년 말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하기로 한 10.3 합의가 해를 넘기면서 아직까지 북미간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당분간 신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따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는 조금씩 보이고 있다. 미국의 협상파와 한국 정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신고만으로도 적성국 교역법 등을 해제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확산 의혹은 비공식 채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며 주석(footnote)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워싱턴 소식통, 1. 27)이라고 한다. 북한도 영변 핵시설 현장을 미 언론에 공개하는 등 북핵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미간 의견 조율을 통해 북핵 신고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핵 폐기 단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을 연계하는 신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새로운 남북 관계 모색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리처드 루가 의원의 보좌관이 '년-루가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을 위한 실태 조사차 지난 2월 12일 방북한 것도 신고 조치 이후 열릴 핵 폐기 협상을 위한 접근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년-루가 프로그램이 북한에는 핵 기술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 알선을 통해 핵 기술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북한 핵과학자들도 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경수로 사업의 재개도 중요한 대안으로 지적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년-루가 프로그램의 적용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촉진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북한이나 미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주도

---

7) 년-루가 프로그램은 미국이 1990년대 옛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와 핵 물질, 핵 기술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폐기해 온 평화적 핵 폐기 방안이다.

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미 관계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의 역할 수립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